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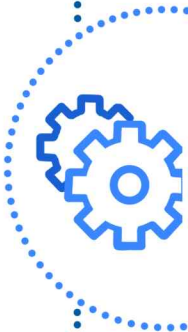




# 목 차

	<b>모빌리티 동향</b> .....	11
<b>해외</b>	- ‘역주행 택시’ 세웠는데 운전자 온데간데...자율주행차 ‘벌금 0원’ 美서 논란 .....	11
	- 중국, 자율주행 무한질주...갈 길 먼 우리나라 .....	12
<b>정책</b>	-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한다 .....	13
	- 미래차 부품 경쟁력 높인다...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7월 시행 .....	14
	- ‘급발진’ 사고도, 불안도, 논란도 급증세...“예방이 최우선 대책” .....	15
	- “어, 옆 차 운전자가 없네?”...한국도 ‘무인 차량배달’ 뜬다 .....	16
	- 비양도에선...치킨이 하늘에서 내려오네 .....	17
<b>PM UAM</b>	- 민·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.....	18
	- “김포시 하늘길 열린다”...도심항공교통(UAM) 구체화 전략 발표 .....	19
	- ‘미래항공모빌리티부품 시험센터’ 충남에 문연다 .....	20





## ‘역주행 택시’ 세웠는데 운전자 온데간데...자율주행차 ‘벌금 0원’ 美서 논란

-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택시 역주행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
  - 2024년 6월 19일, 피닉스 경찰은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정차시켰으나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어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음
  - 해당 차량은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‘웨이모’로, 사측은 차량이 비상등과 사이렌 감지 시 자동 정차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공사 표지판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고 경찰이 세우면서 차선 복귀가 지연되었다고 설명
-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은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위와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
  -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의 편의성 향상, 교통사고 감소,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이 기대되나, 공사 구역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등 안전성과 법적 문제가 존재

<역주행하는 ‘웨이모’ 차량을 정차시킨 경찰의 보디캠에 찍힌 장면>



출처 : 서울신문(2024.07.11) ‘역주행 택시’ 세웠는데 운전자 온데간데...자율주행차 ‘벌금 0원’ 美서 논란





## 중국, 자율주행 무한질주...갈 길 먼 우리나라

- 최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, 한국은 아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
-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성장요인으로 부품 공급망 구축, 적극적인 정부 지원, 방대한 데이터 축적을 꼽을 수 있음
  - (부품 공급망 구축) 중국 업체 '허사이'의 라이다 센서가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도 크게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
    - \* 이러한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'바이두'는 3천만 원대 가격의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 중이며 이는 외국 기업 대비 최대 20% 저렴한 수준
  - (적극적인 정부 지원) 중국 정부는 과감하게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영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
  - (방대한 데이터 축적) 개발업체들이 보행자의 안면 인식 정보 등을 제약 없이 수집하여 자율주행 기술 보완에 활용 가능
- 한국 역시 중국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 육성, 실증 운영 활성화, 법제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
  - (기술 격차 해소 필요)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EU, 일본, 중국보다 최대 16%, 2년 이상 뒤쳐져 있는 상황
  - (실증 운영 및 데이터 축적 부족) 중국 바이두는 이미 5년 전 200만km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한국 업체들은 지금까지도 50만km에 머물러 있음
  - (법제도 개선 필요) 임시 운행만 가능하고 일반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은 점, 사고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제조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
- 그 외에도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이슈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정부, 기업,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함





##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한다

- 자율주행차의 적극적인 도입과 안전한 운행, 그리고 관련 정책 수립에의 활용을 위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될 예정
  - 도로의 기하구조, 교통흐름, 터널·교량 유무,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도로 구간을 유형화하여, 유형별 대표 구간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평가
  -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뿐만 아니라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성능\*도 확인
    - \*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,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
-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하여 향후 자율주행 정책의 획기적 전환 기틀 마련 기대
  - 자율차 운행구역을 기존의 제한적 허용(positive) 방식에서 도로 난이도에 따라 허용 구간을 단계적 확대하는(negative) 방식으로 전환 검토
  -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(C-ITS)\*를 비롯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
    - \* C-ITS(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는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통해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자동화하는 교통체계를 말함
  - 도로 난이도 구분을 통해 도로 난이도에 따라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 통신방식을 적용하고,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을 적용하여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
-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
  -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를 자율차 보급 가속화,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 구축의 효율화 기대







## 미래차 부품 경쟁력 높인다...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7월 시행

- 정부는 '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(이하 미래차부품 산업특별법)' 시행령안을 통과시켜, 2027년까지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·육성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
  -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해 정부는 전기차, 자율주행차, 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을 시행함
  -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△미래차 R&D 예산 대폭 확대(전년 대비 11.1% 증가한 3,490억 원 투입) △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강화(189억 원 투입하여 1,200명 양성 계획) △미래차 부품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(기업 지정 및 부품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등)이 있음
  - 특히 내연기관차 부품에 90% 이상 의존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기차, 수소차 등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등 중소 부품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 전환을 돕고자 함
-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차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완성차-부품사 간 협력 강화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, 국내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<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주요 내용>

### 1 「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」의 골자 및 특징



출처 : 전자신문(2024.06.24) 미래차 부품 경쟁력 높인다...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 7월 시행



## ‘급발진’ 사고도, 불안도, 논란도 급증세... “예방이 최우선 대책”

- 급발진 사고 증가에 따른 불안과 우려, 논란이 급증하면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사고 예방 기술 및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

<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차로 교통사고 현장>



- 일본은 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’와 ‘세이프티 서포트카’ 제도를 도입하여 급발진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음
  - ‘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’은 3~4m 내 장애물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거나 기어가 전진으로 감지되면 가속페달이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, 차량이 오조작을 감지하고 곧바로 정지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
  -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’가 장착된 차량에 구매 지원금과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‘세이프티 서포트카’ 제도를 시행하여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음
  -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은 아직 소극적인 편이나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부터 기술 개발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
- 국내에서도 관련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설치 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
  - 관련 장치로는 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’ 외에도 급가속 현상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‘비상자동 제동장치(AEBS,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)’가 있으며 사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인 ‘페달 블랙박스’도 있음
  - 고령 운전자들이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적 대응 방안과 더불어 운전자 교육 및 면허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

모  
빌  
리  
티



출처 : 경향신문(2024.07.11.) ‘급발진’ 사고도, 불안도, 논란도 급증세... “예방이 최우선 대책”

매일신문(2024.07.03) 고령 운전자 사고 막는 ‘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’... “국내 도입 시급”



## “어, 옆 차 운전자가 없네?”...한국도 ‘무인 차량배달’ 뜬다

-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무인 차량배달 서비스\*가 내년부터 시작되면서 ‘사람 없는’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일이 흔해질 전망

\* 차량 공유 서비스 등에서 차량을 고객의 집 앞 등 원하는 곳으로 무인 운전을 통해 배달해주는 서비스

- 이를 위해 차량을 무인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조종하는 시스템인 ‘원격운전’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무인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과도기적 기술
- 경찰청은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주요 모빌리티 업체들도 다양한 무인 차량 서비스를 준비 중

- 차량공유 1위 업체 쏘카는 독일 스타트업 베이(Vay)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 중 무인으로 렌트 차량을 배달하고 회수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

-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조종 기술을 활용해 유인 차량배달을 일부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
- 무인 차량배달이 가능해지면 배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고객이 차량 반납을 위해 직접 이동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

- 정부는 지난달 제네시스 GV80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임시 운행허가를 내주는 등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지원 중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자율주행 차량에 원격 제어 기술이 일부 적용되어 차량배달이나 고장 시 제어권 전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
- 다만 제3자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차량의 도로 주행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한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

-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과 원격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 공유 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

모  
빌  
리  
티



출처 : 한국경제(2024.07.01) “어, 옆 차 운전자가 없네?”...한국도 ‘무인 차량배달’ 뜬다





## 비양도에선...치킨이 하늘에서 내려오네

- 제주도는 지난 7월 3일 비양도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 가파도와 마라도에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시
  - 비양도는 매주 목·금요일, 가파도와 마라도는 매주 수~금요일 서비스를 제공
  - 드론을 통해 선박 운항이 없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생활필수품 등을 부속 섬으로 배송하고 섬에서는 해산물 등을 본섬에 전달
  - 거리와 드론 특성에 따라 비양도와 마라도는 최대 3kg, 가파도는 최대 15kg까지 배송 가능
  - 배송 콜센터나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고 이달까지는 무료이나 다음 달부터 주민은 3,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관광객의 서비스 이용료도 산정 중
- 제주도는 올해 ‘부속 섬 드론 운송 시범사업’을 운영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추진해 도서 지역 드론 물품 배송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
  - 제주도는 ‘드론 특별자유화구역’과 ‘드론 실증도시’로 지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중
  - 올해는 부속 섬 배송 사업 외에도 UAM 노선 기상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3일 워터밤 행사에도 드론을 투입할 계획

<비양도에 드론으로 치킨이 배달되는 모습>



출처 : 경향신문(2024.07.09) 비양도에선...치킨이 하늘에서 내려오네







## 민·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

-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and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’ 체결

\* 참여한 기관은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 한국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,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, 주요 PM 대여업체 등 16개 기관

- 최근 5년간 PM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3년 한 해만 2,38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
- 또한 운전 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,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

- 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’의 주요 추진 내용

- PM 최고속도 하향(시속 25km → 시속 20km) 시범 운영,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(7~9월), 10대·20대 대상 체험 교육 실시 및 표준 교육자료 제작·배포
- 전광판, 편의점 모니터, 유튜브, KTX 객실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,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

<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카드뉴스>



- PM이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and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

출처 : 정부 보도자료(2024.07.08) 민·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





## “김포시 하늘길 열린다”...도심항공교통(UAM) 구체화 전략 발표

- 2024년 6월 21일, 김포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이 공동 주최한 ‘2024 UAM 산업육성 전략’ 포럼에서 김포시는 도심항공교통(UAM)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
- UAM 운영 위험도 분석 및 최적 비행로 설계 등 관내 공역과 항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
  - 도심항공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활인구, 송전탑, 공역, UAM기체 운영 위험도 등을 평가해 위험안전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토대로 인접권역 내 공역 현황을 분석해 최적 이동 항로 설계
- UAM 버티포트\* 입지로 한강신도시 호수공원과 항공산업단지 헬리포트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
  - \* UAM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체의 이착륙 및 탑승시설
  - 중장기적으로는 콤팩트시티, 백마 헬리포트, 걸포북변 등 3곳이 비행로 설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
- UAM 관련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UAM 상용화 전망, 운항 및 교통관리 방안, 생태계 혁신 방안 등을 발표
  - 김병수 김포시장은 "영화와 만화에서 봤던 비행기가 도심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열릴 것"이라며 김포시가 UAM 도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
- 이번 포럼을 통해 김포시는 UAM 운영 안전성 확보와 최적 입지 선정, 상용화 전략 등을 구체화
  - 김포시는 2022년 8월 UAM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, 향후 한국공항공사, KTL 등과 협력해 UAM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

모  
빌  
리  
티



<UAM 산업육성 전략 포럼에서의 김병수 김포시장과 참석자들>



출처 : 머니투데이(2024.06.21) “김포시 하늘길 열린다”...도심항공교통(UAM) 구체화 전략 발표



## ‘미래항공모빌리티부품 시험센터’ 충남에 문연다

- 충남도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남테크노파크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, 한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‘미래항공모빌리티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’ 구축 사업을 유치
  - 충남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인 ‘그린 도심항공교통(UAM)·미래형 항공기체(AAV)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’ 사업에 선정
  - 이에 따라 총사업비 320억원(국비 150억원 포함)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에 미래항공모빌리티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
  - 충남도는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해 핵심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장비를 도입하고 부품 개발 기업에 대한 평가지원, 시제품 제작지원,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
  - 충남도는 앞서 서산시,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수소기반 미래항공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해 옴
- 자동차, 기계, 철강 등 제조업 기반이 발달한 충남도는 항공산업 육성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, 서산·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가능
  - 이번 미래항공모빌리티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서산공항, 현대차 미래항공모빌리티 시험장, 한서대 태안비행장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
  - 또한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집중된 도심항공교통·미래형 항공기체 개발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


출처 : 파이낸셜뉴스(2024.07.04) ‘미래항공모빌리티부품 시험센터’ 충남에 문연다